

‘2000명 증원’ 어떻게?... 의료계 “혼란 가중”

윤 “기득권에 굴복 않겠다” 했지만 전공의 등 의료계 ‘직접만남’ 제안 비상경영 중인 대학병원들 ‘축각’ 전남대·조선대·기독병원협의체 “의·정갈등 해소로 국면전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에 타협은 없다”고 밝힌 지 만 하루 만에 ‘전공의 직접 만남’을 제안해 강대강 대치가 풀릴지 주목된다. 공을 넘겨 받은 전공의단체와 의대교수들은 ‘환영하지만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의료대란 장기화로 비상경영 등을 하던 지역 의료계는 ‘재빠른 의·정갈등 해소로 국면이 전환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전날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의료계도 합리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정부에 제시한 ‘7대 요구안’ 입장만 유지 중이다.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화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및 증·감원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

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이 입장 발표에 조심스러운 까닭은 ‘만나봐야 양측 입장차만 확인할 것’이라는 회의감 때문이다.

조선대 의대 관계자는 “정부가 전공의를 ‘꼭’ 짚어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이 결국 현장에서 돌아와야 사태가 해결되기 때문”이라며 “중재를 위해 손을 내민 건 올바른 방향이지만 진솔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생활고에 허덕이면서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제안에 응할만한 해결 방향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한 2차병원 전문의는 “사직을 고민 중이던 주변 교수들이 이를 전 대통령 담화를 보고 ‘강력 투쟁’을 결심했다”며 “2000명 의대 정원에 합의는 없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람이다. 그런데 갑자기 전공의와 대화를 하겠다니 진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의료 현장만 더 혼란스러워 졌다. 되레 ‘정치적으로 의사들을 이용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의대교수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무조건 만나자고 한다면 대화 제의의 진정성이 없다”며 “합리적 방안을 만든다는 전제하에 대통령과 전공의가 대화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제시한 대화 제안을 거절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의대 교수 이탈까지 걱정하게 된 지역 수련병원들은 재빠른 의·정갈등 봉합이 절실하다.

부서 통폐합을 비롯, 전문의·진료 지원 간호사(PA) 중심의 비상진료·경영체계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파견한 공중보건의·군의관 등의 일선 진료과 배치도 전공의·전임의 공백을 메우기는 여의치 않다. 폭증한 당직 근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체력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전문의들도 상당수다.

공여직책으로 광주시와 전남대·조선대·광주기독병원은 이날 ‘병원 간 협업 체계 구축 회의’를 진행, 생명이 위급한 응급 중증 환자의 수술에 대해 각 병원이 돌아가면서 전담하기로 했다. 병원 1곳이 수술·치료를 맡으면 남은 두 병원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는 구조다.

전남대학교 관계자는 “의대 교수 상당수가 사직의사를 밝힌데다 조만간 주 52시간 근무에 돌입하는 과도 생김다. 매일이 비상 상황”이라며 “수련을 위한 인턴 임용 신청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남아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감은 커지는데 상황은 요지부동이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전남대·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임용 마감일인 2일까지 전남대 101명·조선대 36명 등 전공의 수련생(인턴) 전원이 임용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은 인턴들은 수련을 받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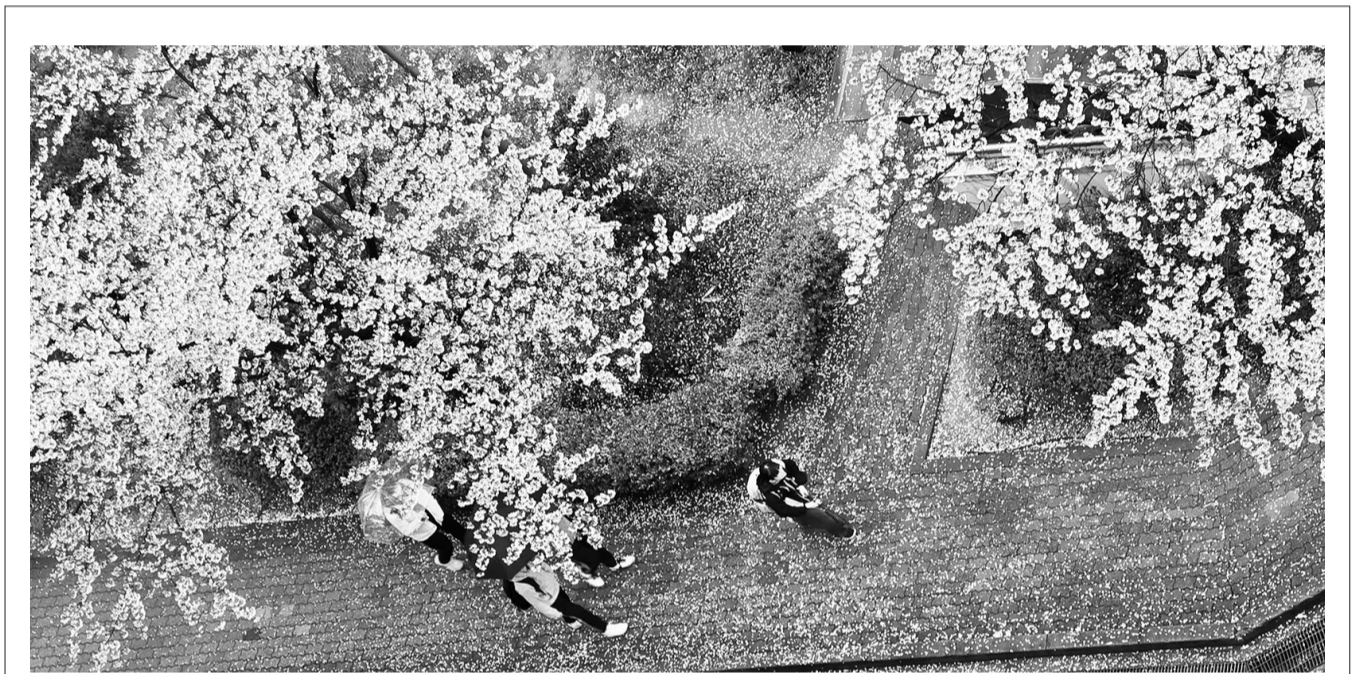
공공의료계는 ‘사람 메꾸기 식의 대안

은 이제 한계’라며 의·정갈등 해소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한 의료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전국의 지역 보건의료인들이 긴급 차출됐다. 이는 결국 가뜰이나 부족한 지역 의료 인프라가 더 악화되는 계기가 됐다”며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 그만큼 사명감을 가진 지역 보건인들이 힘써준 덕이다. 정부·의료계의 현명한 타협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봄비에 벚꽃 낙하
봄비가 내린 3일 광주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 활짝 핀 벚꽃이 비와 바람에 떨어져 인도를 뒤덮은 가운데 학생들이 꽃잎을 밟으며 등교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검찰 “최영환 전 시의원,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적극 개입”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광주시교육청의 사업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수익 은닉·공

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시교육청이 추진한 사업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사업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사업 선정 관련 정보

나 절차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6200여만 원을 받아 행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제7회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원으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사업유치원 선정 위원에 선정되기 전부터 사업유치원 관계자와 부당 거래를 공모했다.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기존 사업 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

자로 한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이 바뀐 예정이라서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지는 않았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2022년 6월2일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으며 1년 7개월의 잠적 생활 끝인 올해 1월30일 자수했다.

이날 열린 최 전 의원의 재판은 변호인 변경을 이유로 피고인의 공소여부 인정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유치원 관계자 A 씨와 유치원 원장 2명,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전직 언론인 등 5명은 제3차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5년을 구형했고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송민섭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